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 정위 공채(일반) 2교시 >

- [필수] 해양경찰학개론(01)
- [선택] 범죄학(06), 행정법(07), 행정학(08), 헌법(05)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분야, 계급,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해양경찰학개론

1. 다음 중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연 1회 이상 불시 비상소집 전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상소집 전화응소는 1시간 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비상소집 시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구조비상, 정보수사비상, 방제비상이 있다.
- ④ 가용인력은 출장·휴직·휴가·파견·교육중인 인원과 가용경비세력 운용인력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2.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상 관제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 ②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 ③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④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3.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서 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4. 다음 <보기> 중 불법 외국어선 단속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령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해양경비법」
 - ㉡ 「선박안전 조업규칙」
 -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 「해양환경관리법」
 - ㉥ 「해양과학조사법」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5.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으로 구분된다.
- ②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 ③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 ④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6.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난구조’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 ②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③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④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다음 중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상 구조본부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급 구조본부와 하급 구조본부가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수색구조 현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역구조본부장이 한다.
- ② 하급 구조본부장이 수색구조활동을 지휘할 경우 상급 구조본부장은 지휘 구조본부에 대한 지원 및 임무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 ③ 상급 구조본부장은 하급 구조본부의 운영 단계가 해양재난 관리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하급 구조본부의 운영 단계를 상향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④ 각급 구조본부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대비단계, 대응 1단계, 강화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및 대응 3단계로 구분하여 구조본부를 비상가동한다.

8. 다음 <보기> 중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 기 > —

- ㉠ 동일 직렬,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 ㉡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이동시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 ㉢ 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	㉡	㉢
①	전직	전보	전입
②	전직	전입	전보
③	전보	전입	전직
④	전보	전직	전입

9. 다음 중 해양경찰청이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소관하는 법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밀항단속법」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 ③ 「경찰공무원법」
-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0.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할 운항 규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다른 수상레저기구 등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된다.
- ㉡ 다른 수상레저기구 등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수신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 ㉢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 또는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
- ㉣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 ㉤ 안개 등으로 시정이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레이더 및 VHF 통신설비를 갖춘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있다.
- ㉥ 다른 수상레저기구 등을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수상레저기구 등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 등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 등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 다른 사람 또는 수상레저기구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1. 다음 중 범죄수사의 3대 원칙(3S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속착수의 원칙
- ② 현장보존의 원칙
- ③ 민중협력의 원칙
- ④ 적정추리의 원칙

12. 다음 중 「낙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 낙시인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명할 수 있는 자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③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13.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 기 > —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하여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만시설에 영향을 주는 보안사건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하고 보안위협을 탐지하기 위하여 당사국 정부, 정부기관, 지방관청 및 해운·항만사업체 간 상호협력을 통한 국제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테러로부터 선박과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

- ① SAR ② MARPOL
③ IUU ④ ISPS CODE

14. 다음 <보기>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 (나)를 더한 값으로 옳은 것은?

— < 보 기 > —

- ㉠ 기름기록부는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가)년 동안 보존한다.
㉡ 폐기물기록부는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나)년 동안 보존한다.

- ① 4 ② 6 ③ 8 ④ 10

15. 다음 <보기> 중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대테러 특공대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모두 고르시오.

— < 보 기 > —

- ㉠ 국방부 ㉡ 해양경찰청 ㉢ 경찰청
㉣ 국가정보원 ㉤ 해양수산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16. 다음 중 외교사절단의 장을 파견할 때 파견국이 외교사절단의 장을 통해 접수국 원수 또는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것은?

- ① 아그레망 ② 신임장 ③ 위임장 ④ 인가장

17.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게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국금지 ② 출국정지
③ 출국명령 ④ 출국권고

18. 다음 중 「해양경찰수사규칙」 및 「(해양경찰청) 범죄 수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변사체 인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 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소속 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③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19. 다음 중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② 모든 국가는 연안국의 동의 없이 연안국의 대륙붕에서 정착성 어종을 수확할 수 있다.
③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모든 목적의 시추를 허가하고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④ 연안국은 측지자료를 비롯하여 항구적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표시하는 해도와 관련 정보를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20. 다음 중 해양경찰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953년 12월 23일 부산에서 해양경찰대가 창설되었으며, 1978년 10월 청사를 인천으로 이전하였다.
- ② 1962년 「해양경찰대설치법」을 제정하여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69년 동해와 서해에 어로보호본부를 설치하여 어로보호를 강화하였다.
- ③ 2005년 해양경찰청장 직급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상향되었고, 2006년 동해·서해·남해·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신설되었다.
- ④ 2014년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본부장 직급이 치안정감으로 바뀌었고, 청사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되었다.

21. 다음 중 해양경찰의 해양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해기선의 안쪽 수역인 내수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내수에 대한 관할권을 어느 국가기관에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 ② 영해에서 외국선박이 허가없이 항공기를 탑재하거나 잠수 항행하는 것은 무해통항권에 위반된다.
- ③ 영해에서 외국 군함이나 외국 정부 선박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정선이나 검색 또는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관할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정선·승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 다음 중 해양경찰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은 전국적이며 집권적인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상대적으로 자치경찰로 변화하기가 어렵다.
- ② 해양경찰은 합정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를 '일정다역(一艇多役)'이라 한다.
- ③ 해양경찰공무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직 경찰공무원에 속한다.
- ④ 해양경찰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일반사법경찰권을 갖는다.

23.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 징계는 해양경찰관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 총경에 대한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결을 거친 징계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 경정의 파면 및 해임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경정의 강등 및 정직 권한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있다.
- ㉣ 강등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1/2을 감한다.
- ㉤ 정직과 감봉은 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는 각 전액을 감하며, 정직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한다.
-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경찰공무원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 ③ 「경찰공무원법」에 경찰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따라서 경찰공무원 보수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 ④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공무원법」은 적용되지만 「경찰공무원법」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도 있다.

25. 다음 중 「합정 운영관리 규칙」에 합정장이 직접 조합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형 사고 발생으로 신속하게 출동하는 경우
- ② 좁은 수로를 통과하거나 제한된 시계에서 항해하는 경우
- ③ 합정 승조원 전원을 특수직무 분담표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
- ④ 합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6. 다음 중에서 「경찰공무원법」상 규정된 의무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치관여금지 의무
- ② 직무전념 의무
- ③ 비밀엄수 의무
- ④ 재산등록 의무

27.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해양경비법」상 해상검문검색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심검문 중 임의동행은 요구받은 사람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의 사항이지만, 해상검문검색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 등을 추적·나포할 수 있는 강제 사항이다.
- ② 불심검문의 1차 대상은 사람이지만, 해상검문검색의 1차 대상은 선박 등이다.
- ③ 불심검문과 해상검문검색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 ④ 해상검문검색은 불심검문보다 상대적으로 강제력이 강한 경찰작용으로 볼 수 있다.

28. 다음 중 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이 불심검문, 검문검색, 보호조치 등을 행할 때 원칙적으로 증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을 할 때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을 할 때
- ③ 「해양경비법」상 피난 조치를 할 때
- ④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단속을 할 때

29. 다음 행정기관의 처분 중에서 강학상 법적 성질이 가장 다른 것은?

- ① 어업면허
-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③ 도선사 면허
- ④ 유선사업 면허

30. 다음 해양경찰에 대한 통제 유형 중에서 사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심판
- ② 행정절차 상 입법예고
- ③ 감사원의 직무 감찰
- ④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심사

31. 다음 중 법률 제정 절차와 예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안 발의는 정부와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지만, 예산의 편성은 정부만 할 수 있다.
- ② 법령안 심사 등 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는 법무부이며,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재정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이다.
- ③ 해양경찰청 법률안과 예산안은 모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
- ④ 법률안과 예산안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성립된다.

32. 다음 중 「해양경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근거한 II·III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교육원장
- ② 해양경찰정비창장
- ③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
- ④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33.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34.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상검문검색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세력을 사용하여 경비수역에서 선박 등을 대상으로 정선(停船) 요구, 승선(乘船), 질문, 사실 확인, 선체 수색이나 나포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해양경비 활동 대상인 ‘선박 등’에는 요트, 모터보트는 포함되지만, 수면 위에 고정되어 있는 해양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영해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3마일 수역은 경비수역 중에서 근해수역에 해당한다.
- ④ 해양경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X류 물질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유해액체 물질
②	Y류 물질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 물질
③	Z류 물질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간의 건강에 경미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배출을 일부 제한하여야 하는 유해액체 물질
④	기타 물질	「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코드」 제18장의 오염분류에서 기타 물질로 표시된 물질로서 탱크세정수 배출작업으로 해양에 배출할 경우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나 해양자원, 해양의 쾌적성, 그 밖에 이용에 위해가 없다고 간주되어 X, Y, Z물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36. 우리나라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외국 선박에 대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UN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 추적당하고 있는 선박이 다른 나라 영해에 들어가면 추적은 중단된다.
- ②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근거하여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해서 정선(停船), 승선, 시정,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나, 검색·나포는 할 수 없다.
- ③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은 추적권의 행사, 정선(停船)·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해양경비법」에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이나 추적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7.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상 등록 및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상레저 기구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스쿠터이다.
- ②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필요가 없다.
- ③ 출발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거나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항 입항신고를 한 선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수상레저사업자는 14세인 사람이나 술에 취한 사람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서는 아니 된다.

38. 다음 중 「통합방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을중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 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하여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② ‘병중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 을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39. 다음 <보기> 중 경찰정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 적실성-정보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그 가치를 발휘한다.
- ㉡ 완전성-정보는 그 자체로서 정책 결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가능한 망라하고 있어야 한다.
- ㉢ 정확성-정보는 사실과 일치되어야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정보라 할 수 없다.
- ㉣ 적시성 - 정보는 정보 사용자가 현재 당면하고 있거나 당면하게 될 문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40. 다음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거점파출소’란 사고 빈발 해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해양경찰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초기 구조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잠수구조요원을 배치한 파출소를 말한다.
-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구조대와 거리, 사고발생 빈도, 선박통항량,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치안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 순찰근무는 관내를 돌아다니는 근무로서 해안순찰과 해상순찰로 구분하며 주로 해안순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 ④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되, 통신기기를 청취하며 5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범 죄 학

1. 다음 중 공식범죄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식범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암수범죄를 반영하기 어렵다.
- ② 우리나라의 범죄통계자료로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백서」가 있다.
- ③ 질적 분석보다는 양적 분석을 위주로 하므로 개별 사건의 비중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 ④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 기관에 따라 공식 범죄통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 다음 중 암수범죄와 그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암수범죄의 직접적 관찰방법에는 범죄피해 조사, 정보제공자 조사가 있다.
- ② 암수범죄의 유형 중 절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 ③ 자기보고식 조사(self-report survey)는 응답자에게 자신의 범죄나 비행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사방법이다.
- ④ 범죄피해 조사는 살인범죄, 경제범죄, 경미한 범죄 피해 등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 다음 중 범죄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참여적 관찰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집단 구성원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연구방법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할 소지가 많아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 ② 서덜랜드(Sutherland)의 전문절도범(professional thief)연구는 대표적인 사례연구(case study)이다.
- ③ 실험연구는 일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한 후 그 속에서 발생하는 사실을 관찰하여 특정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 ④ 추행조사(추적조사)(follow-up-study)는 수직적(종단적)연구방법에 해당한다.

4. 다음 중 범죄학의 개념과 특성 및 범죄학의 연구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주장에서 제시된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이다.
- ② 범죄학은 형사정책에 비해 규범과학적 성격이 강하다.
- ③ 서덜랜드(Sutherland)와 크레시(Cressey)에 따르면 범죄학은 그 범위내에 법 제정 과정, 법 위반 과정, 법 위반에 대한 대응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 ④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에 따르면, 범죄는 사회적 유해성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5. 다음 중 실증주의 범죄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생물학적·심리학적 소질과 사회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간이 범죄행위를 범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 ② 페리(Ferri)는 결정론적 입장에서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 ③ 라카사뉴(Lacassagne)는 사회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할 뿐이므로 별해야 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라고 주장했다.
- ④ 뒤르켐(Durkheim)은 범죄는 정상적인 요소이며 모든 사회와 시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범죄개념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6. 다음 중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링(Goring)은 롬브로소(Lombroso)의 생래적 범죄자의 생물학적 열등성에 대한 연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 ② 초남성(Supermale)으로 불리는 XXY성염색체를 가진 남성은 보통 남성보다 공격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③ 크레취머(Kretschmer)는 체형을 비만형, 운동형(투사형), 세장형으로 분류한 후 체형과 범죄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 ④ 랑게(Lange)는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7. 다음 중 심리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에 대한 10가지 분류 중 무정성 정신병질자는 동정심이나 수치심 등 인간의 고등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유형으로, 토막살인범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 ② 헤어(Hare)는 사이코패스의 진단방법으로 PCL-R을 개발하였다.
- ③ 콜버그(Kohlberg)의 도덕발달이론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덕발달 6단계 중 1단계, 2단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④ 아이크혼(Aichhorn)은 초자아가 과잉발달한 경우 범죄에 따른 처벌을 통하여 죄의식을 해소하고 심리적 균형감을 얻기 위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였다.

8. 다음 중 사회해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파크(Park)와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에 따라 시카고지역을 5단계로 분리하였을 때, 빈민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범죄발생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다.
- ② 초기 시카고학파의 학자들은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cy)를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③ 쇼(Shaw)와 맥케이(Mckay)의 사회해체이론은 사회해체의 요소로 낮은 경제적 지위, 민족적 이질성, 거주불안정성 등을 주장하였다.
- ④ 샘슨(Sampson)은 집합효율감(collective efficacy)의 강화가 범죄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9. 다음 중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hi)의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 ② 고전주의학파의 범죄 속성을 따르면서도 실증주의학파의 일반인과 다른 범죄자의 특성을 강조해 통합하고자 하였다.
- ③ 자기통제의 주요개념으로 통제비율(control ratio)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통제가 결핍되면 약탈적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 ④ 거시적인 사회구조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10. 다음 중 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Delinquent Subcultur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간계층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에 대한 부적응이 긴장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 ② 모든 하류계층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다.
- ③ 비행하위문화의 특성 중 '부정성(negativism)'은 사회적으로 널리 보편화 되어있는 하류계층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속성을 말한다.
- ④ 비행하위문화의 특성으로 '악의성(maliciousness)', '단기적 쾌락주의(short-term hedonism)' 등이 있다.

11. 다음 중 밀러(Miller)의 하류계층문화이론(Lower Class Cultur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와 비행은 중류계층의 가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하류계층문화 자체가 집단비행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 ② 밀러(Miller)가 하류계층 사람들의 중심적인 관심 사항으로 제시한 내용 중 자율성(autonomy)은 코헨(Cohen)이 주장한 비행하위문화이론의 자율성과 동일한 개념에 해당한다.
- ③ 하류계층의 비행은 그들만의 독특한 관심을 따르는 동조행위이며 반항이나 혁신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④ 하류계층의 중점적인 관심사항(focal concern)에는 운명주의(fatalism), 강인함(toughness), 사고치기(trouble) 등이 있다.

12. 다음 중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의 차별 접촉강화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Reinforcemen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학습 요소로서 차별접촉, 차별강화, 정의, 모방을 제시하였다.
- ② 차별강화는 행위의 결과로 얻게 되는 보상과 처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③ 어린아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부모가 적절하게 훈육을 한다면 그 아이는 나쁜 짓을 덜 하게 되며, 이는 부정적 처벌(negative punishment)에 해당한다.
- ④ 행위에 대해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 그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를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라 한다.

13. 다음 <보기>는 통합이론 및 발달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나열한 것이다. <보기>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를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 < 보기 > —

- ㉠ 연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지속성과 가변성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발생하는 사건과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 ㉡ 비행 청소년이 되어가는 경로를 조기개시형(early starters)과 만기개시형(late starters)으로 구분하였다.
- ㉢ 범죄자를 청소년기 한정형(adolescent-limited)과 생애지속형(life-course persistent)으로 분류하였다.

	㉠	㉡	㉢
①	패터슨(Patterson)	샘슨(Sampson)과 라웁(Laub)	모핏(Moffitt)
②	모핏(Moffitt)	패터슨(Patterson)	샘슨(Sampson)과 라웁(Laub)
③	샘슨(Sampson)과 라웁(Laub)	패터슨(Patterson)	모핏(Moffitt)
④	샘슨(Sampson)과 라웁(Laub)	모핏(Moffitt)	패터슨(Patterson)

14. 다음 중 벤담(Bentham)의 파놉티콘(Panoptic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봄-보여짐의 비대칭적 구조를 갖고 있다.
- ② 수형자에게 강제노역은 유해하므로, 노동은 원하는 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채찍이론을 통하여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을 비판하고 수형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엄격함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 ④ 최초로 야간독거제를 주장했으며, 수형자 상호간의 접촉은 차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15. 다음 중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범죄자에게 있어서 범죄의 상황적 요인은 고려되지 않는다.
- ② 범죄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불법 행위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 ③ 범죄경제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다.
- ④ 범죄자 개인의 학습과 경험은 범죄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

16. 다음 중 사회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는 피지배계층을 통제하기 위한 지배계층의 억압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 ② 볼드(Vold)는 입법정책 영역에서 집단갈등이 가장 격렬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 ③ 터크(Turk)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그로 인한 범죄성을 지배와 복종관계에서 규명하려고 했기에 그의 이론을 지배-복종(authority-subject)이론이라고 한다.
- ④ 한 사회의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17. 다음 중 신경생리학적 조건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정상적인 도파민 수치는 충동적 행위 및 폭력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②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은 충동성, 공격성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이다.
- ③ 모노아민 산화효소 A(monoamine oxidase A) 유전자가 과활성화 형태를 가지게 되면 폭력 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④ 낮은 수준의 세로토닌은 특히 기질, 공격성, 충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

18. 다음 중 클로워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적 기회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에서 주장한 범죄적 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성공을 위한 합법적인 기회도 없고, 성인들의 범죄도 조직화되지 않아 소년들이 범죄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는 지역에서 형성되는 하위문화이다.
- ② 성공을 위한 합법적 수단의 이용이 어렵고 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없는 이중의 실패를 경험한 집단에서 형성되는 하위문화이다.
- ③ 개인적이고, 조직화되지 못한 무분별한 조직 폭력배들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 형성되는 하위문화이다.
- ④ 범죄행위가 장려되고 불법이 생활화된 지역에서 형성되는 안정적인 하위문화이다.

19. 다음 <보기> 중 레페토(Repetto)의 범죄 전이(crime displacement)의 예시와 전이유형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 ㉠ 어떤 지역에서 범죄 예방활동이 행해지면 그러한 범죄 예방 활동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 범죄자가 경찰순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범죄를 범하는 경우

- ① ㉠-지역적(Territorial)전이 ㉡-시간적(Temporal)전이
② ㉠-지역적(Territorial)전이 ㉡-기능적(Functional)전이
③ ㉠-전술적(Tactical)전이 ㉡-시간적(Temporal)전이
④ ㉠-전술적(Tactical)전이 ㉡-기능적(Functional)전이

20. 다음 중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 양형 서클 모델, 피해자-가해자 중재모델 등이 있다.
② 회복적 사법은 범죄감소를 위한 공동 협력을 국가에게만 맡긴다.
③ 응보적 사법에서 피해자는 사법절차의 직접 참여자로서 범죄해결 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④ 회복적 사법의 목표는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회복이다.

21. 다음 중 전환제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도소의 과밀 수용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 전환제도는 낙인이론의 산물로서 경미범죄를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경찰단계에서의 전환제도는 통고처분, 경고, 훈방 등이 있다.
④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은 전환제도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22. 다음 중 클라크(Clark)가 주장한 자주 도난당하는 제품(취약물품)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 가능한(disposable)
② 즐거운(enjoyable)
③ 이용 가능한(available)
④ 숨길 수 없는(unconcealable)

23. 다음 중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란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표시를 강화하여 공간이용자가 사적공간에 들어갈 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원리를 의미한다.
② 활동성의 증대(Activity support)란 주민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시민의 눈에 의한 감시를 이용하여 범죄위험을 감소시키는 원리를 의미한다.
③ 영역성의 강화(Territorial)란 건축물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범죄발각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리를 의미한다.
④ 자연적 접근통제(Access control)란 시설물이나 장소를 처음 설계대로 유지하여 범죄예방의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를 말한다.

24. 다음 중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상 비범죄화는 국회의 입법으로 법률이 폐지되거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에 의한 비범죄화를 의미한다.
②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비범죄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수사상 비범죄화는 수사기관이 형벌법규가 존재함에도 사실상 수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간통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비범죄화 되었다.

25. 다음 두 사람의 대화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

민지 : 유진아, 그 메일 열지마!
유진 : 왜? 여기 내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민지 : 아니야. 이거 요즘 신종수법인데, SNS에서 얻은 내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해서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하는거야. 악성 코드가 이름, 비밀번호, 은행 계좌 정보, 신용카드 번호 및 기타 개인 정보와 같은 세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메일 첨부 파일을 열도록 요청하는 사기의 유형이야.

- ①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② 살라미 기술(salami technique)
③ 돼지도살 사기(pig butchering scam)
④ 슈퍼재핑(super zapping)

26. 다음 중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할 응급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스톱킹 행위의 제지
- ② 재발 우려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③ 스톱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 ④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 스톱킹 피해 관련 보호 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

27. 다음 중 아동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리적 특징으로는 냉담한 태도로 사람을 피하면서 눈동자만은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며 위험이 있는지 탐색하는 ‘얼어붙은 감시상태(frozen watchfulness)’가 있다.
- ② 학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특징이 있다.
-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방임과 무관심도 아동학대의 유형에 해당한다.
- ④ 암수범죄가 많고, 장기간 은폐되는 특징이 있다.

28. 다음 중 마약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코카인에 베이킹파우더를 섞어 담배형태로 피울 수 있는 크랙(crack)은 가격이 저렴하여 흑인, 유색인종들에게 애용되고 있다.
- ② L.S.D는 호밀에 생기는 곰팡이인 맥각에서 추출된 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 ③ YABA는 주로 종이에 묻혔다가 뜯어서 혀바닥을 통해 입에 넣는 방법으로 남용된다.
- ④ 황금의 초승달 지대란 이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의 접경지역에 위치하는 아편 생산지대이다.

29. 다음 중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워너(Warner)는 ‘경험표’라고 불린 예측표를 작성하여 객관적인 범죄예측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 ② 예측방법 중 ‘통계적 예측’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판단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어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③ 미래에 범죄를 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오류부정(false negative)’의 경우 개인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단점이 있다.
- ④ 수사단계에서의 소년사건에 대한 범죄예측은 수사 종료 시 비행소년 처우 결정의 기초 자료가 된다.

30. 다음 중 타르드(Tarde)의 모방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거리의 법칙에 따르면 한 개인이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빈도와 강도에 따라 타인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 ② 롬브로소(Lombroso)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과학적 방법을 통해 범죄유발요인을 규명하려 했다.
- ③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 ④ 방향의 법칙은 농촌에서 발생한 범죄가 도시지역에서 모방하는 경우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31. 다음 중 멘델존(Mendelsohn)이 분류한 피해자의 유형이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자신에 대한 살인을 촉탁 또는 승낙한 자 - 상상적 피해자
- ② 범죄피해를 가장하고 타인을 무고한 자와 같은 기만적인 피해자-완전히 유책성이 없는 피해자
- ③ 상대방에게 학대적인 언행을 하다가 맞은 사람-가해자와 같은 정도의 유책성이 있는 피해자
- ④ 자신의 무지로 낙태를 감행하다가 사망한 임산부-경미한 유책성이 있는 피해자

32. 다음 <보기>의 행동주의 학습이론(Behavioral Learning Theory)에 관한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 보기 > —
- ㉠ 스키너(Skinner)는 조작적 조건화 실험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은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 반두라(Bandura)는 보보인형(Bobo Doll) 실험을 통해 강화 자극이 없더라도 관찰과 모방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고 보았다.
 - ㉢ 반두라(Bandura)는 동기화를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는데, 타인의 행위가 강화되거나 처벌받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외부강화라고 명명하였다.
 - ㉣ 범죄행위는 비정상적 성격이나 도덕적 미성숙의 표현에서 시작되므로 무의식적인 성격이나 인지발달의 정도를 중시한다.

- ① ㉠(○) ㉡(○) ㉢(X) ㉣(X)
- ② ㉠(○) ㉡(○) ㉢(○) ㉣(○)
- ③ ㉠(○) ㉡(X) ㉢(○) ㉣(X)
- ④ ㉠(X) ㉡(X) ㉢(X) ㉣(X)

33. 다음 <보기> 중 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Institutional Anomi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기 >

- ㉠ 머튼(Merton)의 아노미 이론을 확장하여 여러 사회 제도들의 밀접한 연관성과 어떻게 문화가 경제 영역을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는지를 연구하였다.
- ㉡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 규범적 통제의 붕괴를 촉진한다고 보았다.
- ㉢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는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약화시킨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4. 다음 중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가 있다.
- ② 피해자의 참여와 용서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 ③ 수치심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강력한 수단이다.
- ④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재통합하는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미래 범죄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35. 다음은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 ㉡, ㉢에 해당되는 원칙이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기 >

- ㉠ 우범소년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 ㉡ 소년의 인권보장과 재범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이념으로, 소년의 비행과 신상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소년법」 제68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 ㉢ 비행소년의 처우를 법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조사결과와 분석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년법」 제12조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 ① ㉠ 예방주의 ㉡ 밀행주의 ㉢ 과학주의
 ② ㉠ 교육주의 ㉡ 개별주의 ㉢ 인격주의
 ③ ㉠ 예방주의 ㉡ 인격주의 ㉢ 개별주의
 ④ ㉠ 밀행주의 ㉡ 개별주의 ㉢ 과학주의

36. 다음 중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는 처벌의 신속성, 엄격성, 확실성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②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는 직업적 범죄자들이 재범을 범하지 못하도록 자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 ③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는 미래의 처벌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는 한편, 특별억제는 그것의 집행에 근거한다.
- ④ 억제이론은 대체로 특성이론(trait theory)에 기초하여 법 위반 행동과 규범적 행동 사이의 선택을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37. 다음 중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이론(Theory of Neutr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 위반자는 때로는 위반행위가 단순히 자신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 ② 범죄란 불법행위에 직면할 때 도덕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된 일정의 표준화된 기술을 학습하여 얻은 극복의 결과로 여긴다.
- ③ 훔친 물건은 잠시 빌리는 것 뿐이며, 물건 파손은 이미 쓸모없는 물건에 해를 입히는 것 뿐이라고 여긴다.
- ④ 범죄란 사회의 문화적이고 제도적 영향의 결과로 바라본다.

38. 다음 중 구금에 의한 무능력화(incapacitation)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자가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의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② 범죄자들을 감금함으로써 그들이 범죄를 범할 기회를 줄이려는 시도이다.
- ③ 각종 범죄자들에 대한 무능력화가 늘어나게 되면 교도소가 만원이 되어 교정시스템의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단점이 있다.
- ④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소수의 범죄자들만 선별적으로 장기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9. 다음 <보기> 중 낙인이론에 대하여 옳은 내용만으로 짝지은 것은?

— < 보기 > —

- ㉠ 낙인이론에 의하면 범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낙인 가능성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 ㉡ 헤이건(Hagan)은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은 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범죄자로 낙인 받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 ㉢ 허쉬(Hirschi)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일탈행위를 설명하였는데, 2차적 일탈은 심리적 구조와 사회적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 패터노스터(Paternoster)와 이오반니(Iovanni)에 의하면 낙인이론의 이론적 뿌리는 갈등주의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로 볼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40.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가 제시한 범죄예방 모델 중 2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웃상호감시활동
- ② 전과자 고용
- ③ 시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 ④ 상황적 범죄예방

행 정 법

1. 다음 중 행정의 법률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②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 ③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④ 지방의회에서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 하는 것은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 다음 중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② 국유의 일반재산 대부로 납부고지는 사법상 이행 청구에 해당하고,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므로,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워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④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3.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의 잘못된 해석이나 행정청의 관행에 대하여도 그것이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치행정에 대한 의무를 지는 행정청에 있다.
- ② 계속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인정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경우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③ 하자 있는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 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취소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아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다음 <보기> 중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들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주택재건축사업조합
- ㉡ 원천징수의무자
- ㉢ 대한변호사협회
- ㉣ 전북대학교
- ㉤ 서울대학교

① ㉠, ㉡, ㉤

② ㉠, ㉢, ㉤

③ ㉡, ㉢, ㉣

④ ㉢, ㉣, ㉤

5. 다음 중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무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보조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사인은 그 범위 안에서 국가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며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은 상대방에 의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공법상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 ③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 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 ④ 법무사에 대하여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채용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할 의무는 공법적 의무이며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6. 다음 중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 ②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 ③ 행정사무의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것은 무효의 행정처분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다.

7. 다음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 ②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다소 벗어났다면,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 과징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 ③ 건축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을 때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법령상의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 ④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8. 다음 중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청이라 하여도 이것을 자유로이 취소, 변경 및 철회할 수 없다는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 하더라도 인정된다.
- ②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 ④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9.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일정한 소비자단체는 법원에 권리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10. 다음 처분과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계약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 원칙 등 사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 ③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 환수통보는 사법상의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1. 다음 <보기> 중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만을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 ㉡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 ㉢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 ㉣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의 법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결정
 - ㉤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12. 다음 중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 ③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부관은 그 자체로서 직접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행정처분에 부수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은 주된 행정처분과 독립하여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3. 다음 중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제되는 채광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 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 방향이 제시되며,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

14. 다음 행정지도와 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수도공급의 거부는 사실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강제성을 띠지 않는 행정지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행정지도를 한 행정주체는 손해 배상의무가 있다.
- ③ 행정지도는 비권력작용이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뿐 아니라 방식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5. 다음 중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본법」은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16. 다음 <보기> 중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처분
 - ㉡ 군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
 - ㉢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 처분
 - ㉣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처분
 - ㉤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처분

① ㉠, ㉡, ㉤

② ㉢, ㉣, ㉤

③ ㉠, ㉢

④ ㉠, ㉢, ㉣

17. 다음 <보기> 중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도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 ㉡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
- ㉢ 수익적 행정처분의 신청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침익적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 ㉤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18.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 ②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③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때에는 별도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9. 다음 중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②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 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경찰관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 ③ 명백성 보충설에 의하면 무효판단의 기준에 명백성이 항상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 ④ 절차상 또는 형식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는 후 행정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0. 다음 중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당해 행정기관 내의 2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21.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징금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 ② 행정청이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의 경우 얼마로 할 것인지의 재량이 부여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일지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언론을 통해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

22. 다음 중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② 이행강제금의 취지에 따라 이미 부과되어도 의무이행이 있으면 징수하지 않는다.
- ③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 대집행은 가능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23.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협의취득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행정대집행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은 그 목적을 달리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 이므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계고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
- ④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4. 다음 중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의 제재처분 모두에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대법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③ 기관위임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과 행위자에 대한 양벌 규정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5.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의 요청인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 작용이므로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지방의회에서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는 현행법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④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보호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6.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 ② 즉시강제의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즉시 그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 고지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의 적법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전혀 그 보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 ④ 불법 게임물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수거·폐기를 명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려 직접강제 등 행정상의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면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27. 다음 <보기> 중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 행정조사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 ㉢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에 대해서도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 ㉣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	㉢	㉣
①	X	X	X	O
②	O	O	O	X
③	X	O	O	X
④	O	X	X	O

28. 다음 중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 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판례는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 ④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29. 다음 <보기> 중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도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내지 제재처분이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30. 다음 중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가장 곤란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단법인인 A수녀원이 공유수면 매립목적용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한 처분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는다라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② 소방청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이 공유수면 매립면허처분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④ 관계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기존업자가 경영자에 대한 인허가나 면허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1. 다음 중 취소소송을 제기할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기준을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②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의결 취소소송에서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 ③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 ④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정식이사들이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32. 다음 <보기> 중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는 것들만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권장에 따르지 않으면 일정한 특정 조치를 하여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 ㉡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거부행위
- ㉣ 검사의 불기소결정
- ㉤ 수도요금채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33. 다음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 ②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확정되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은 이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
- ③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④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위법하지는 않으나 부당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 현행법상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4. 다음 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을 처분시로 볼 경우,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적·법적 사유를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계쟁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의 토지에 주유소를 설치·경영하도록 하기 위한 석유판매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할 부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당해 토지가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허가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 대책 수립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유와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하여 주장한 처분 사유인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이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
- ④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가 명기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35. 다음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청에 대한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과 당사자심판이 있다.
- ③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 제도를 두면서 행정심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④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6. 다음 중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일 뿐인 경우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④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쳐도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37. 다음 중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②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서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기준은 실제로 이전하였는지가 아니라 영업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
- ④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근거규정 및 요건·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청구권에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손해에 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청구권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38. 다음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 및 기타 공무원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금지된다.
- ②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지시에 위반하여 한 처분은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 ④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이 범죄 행위 등 명백히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복종할 의무가 없다.

39. 다음 <보기> 중 경찰관의 위험발생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만을 모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하여 그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 ㉡ 경찰관의 위험발생방지조치는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다.
-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 시위가 예상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시위 참가를 위한 제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 ㉣ 경찰관이 위험발생방지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40. 다음 중 경찰권의 행사 및 그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권의 행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경찰권 행사가 부적절하였거나 그와 다른 보다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하는 이유로 경찰권 행사가 위법하게 된다.
- ② 경찰관이 직수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려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수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할 상황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조치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흥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행 정 학

1. 다음 <보기>에 제시된 동기부여 이론 중 과정이론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 ㉡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 ㉢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 ㉣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론론
- ㉤ 브룸(Vroom)의 기대이론
- ㉥ 아담스(Adams)의 형평성이론
- ㉦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 ㉧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2. 다음 중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사결정의 역할을 하는 정치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② 윌슨(Wilson)은 행정을 전문적·기술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행정과 경영이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 공사행정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 ④ 대공황 이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정책결정·형성 및 준입법적 기능수행을 정당화하였다.

3. 공공서비스의 유형 중 공유재가 가지는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비배제성, 경합성 ② 배제성, 비경합성
- ③ 비배제성, 비경합성 ④ 배제성, 경합성

4. 다음 중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치의 공정한 배분
- ② 사회적 약자의 이익보호
-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 ④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5. 다음 중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민주화,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과 정책 수행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② 시험제도를 통하여 무자격자나 정치적 부정 행위자를 배제함으로써 업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 ③ 유능한 인재의 충원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 ④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계속성·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시켜 직업공무원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6. 다음 중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공재로 인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기업이나 민간 참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
- ② 외부경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므로 벌금 부과 등의 공적 유도가 필요하다.
- ③ 조직 내부의 이유로 인해 생산가능성 곡선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X-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 규제 완화 등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하다.
- ④ 지대추구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자원 낭비 활동은 공적 공급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7. 다음 중 행정책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증대로 공직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책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② 행정책임은 행정상의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공익적 요구보다 개인적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다.
- ③ 민간에 대한 행정의 간섭·통제가 증가할수록 국민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행정책임이 강조되었다.
- ④ 행정책임은 강제적·법령적으로는 법률, 명령, 규칙, 행정목표가 기준이 되며, 자율적·추상적으로는 공익, 행정이념, 공직윤리, 여론, 조직목표와 정책·사업계획, 국민 및 수익자 집단·고객의 요구가 기준이 된다.

8. 다음 중 라스웰(Lasswell)이 정책과학 패러다임에서 제시한 정책학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 속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학은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나 역사성을 강조한다.
- ② 정책학은 정책문제의 해결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가진다.
- ③ 정책학은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사실판단을 위한 실증적 접근을 중시한다.
- ④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문제는 어느 한 학문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으므로 인접학문과의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9. 다음 중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배정책에서는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부가 제공한 자원을 나누기 위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 ② 재분배정책은 계급 대립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정책보다 정책담당자의 강력한 신임이 요구되며, 의회의 지도자나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 ③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최저임금제, 최소한의 자원의 소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사전허가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④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비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는 정책으로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10. 다음 <보기> 중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 ㉠ 고객이 아닌 시민에 봉사하라.
- ㉡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 ㉢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 ㉣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 ㉤ 방향잡기보다는 봉사하기를 하라.
- ㉥ 고객을 최우선시하라.
- ㉦ 단순히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여라.

- ① ㉠, ㉡ ② ㉢, ㉥
- ③ ㉣, ㉦, ㉥ ④ ㉢, ㉤, ㉥, ㉦

11. 다음 중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쓰레기통모형은 정책문제, 문제의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등의 요소가 떠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교차되면 정책결정이 발생한다고 본다.
- ② 회사모형은 기존의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③ 합리모형은 실제 정책결정 상황에서 의사결정자는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는 않으며, 접근 가능한 몇 개의 대안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검토하다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발견되면 그 대안을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종료한다고 본다.
- ④ 만족모형은 정책문제 인지, 목표 설정, 대안 분석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여 정책을 결정한다고 본다.

12. 다음 중 가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외성의 산술적 증가는 실패의 확률을 지수적으로 감소시켜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킨다.
- ② 가외성은 능률성·경제성과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집권화와 일치되는 성격이 있다.
- ③ 등전위현상 등은 위험사태에 대한 적응성을 증진시켜 조직의 적응성을 제고시킨다.
- ④ 가외성은 다원적이고 경쟁적인 정보체제를 구축시켜 정보의 정확성이 확보된다.

13. 다음 중 우리나라 공직 분류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 검사, 경찰공무원, 헌법연구관, 경호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 ③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④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14. 다음 중 우리나라 인사기관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2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과 나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 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15. 다음 중 규제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현상
- ②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가 기술 개발을 지연시키는 현상
- ③ 규제가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규제 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
- ④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이 증가하는 현상

16. 다음 중 공공서비스의 적정규모 논의에서 공공서비스의 과다공급론을 주장하는 내용으로만 연결된 것은?

- ① 관료제의 발달 - 다운스(Downs)의 합리적 무지
- ② 갤브레이스(Galbraith)의 의존효과 - 뷰캐넌(Buchanan)의 리바이어던 가설
- ③ 와그너(Wagner)의 법칙 -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조세저항
- ④ 피콕과 와이즈만(Peacock & Wiseman)의 전위효과 - 사회복지의 확산

17. 다음 중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법률로써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는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 ③ 재정운영 주체의 자율성 증대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때 필요하다.
- ④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한다.

18. 다음 중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마치(March)와 사이먼(Simon)은 개인적 갈등의 원인 및 형태를 비수락성, 비비교성, 불확실성으로 구분했다.
- ② 갈등관리에서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느끼는 잠재적 갈등 상태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는 집단 간 갈등의 해결방법에 해당한다.
- ④ 수직적 갈등은 목표의 분업구조, 과업의 상호의존성, 자원의 제한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19. 다음 중 관료제의 역기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블라우와 톰슨(Blau & Thompson)은 조직 내 사회적 관계에서 권한과 능력의 괴리, 모호한 업적평가기준, 공식규범 준수의 압박감 등에 의한 개인 심리의 불안정성이 병리의 원인이라고 본다.
- ② 머튼(Merton)은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행태만을 추구하여 무사안일주의를 초래한다고 본다.
- ③ 피터(Peter)는 계층제적 관료조직 내에서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게 된다고 본다.
- ④ 셀즈닉(Selznick)은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 체제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분열시킨다고 본다.

27.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다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 < 보 기 > —

() (이)란,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에 비해 항상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줌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 ① 총계적 오류(total error)
- ②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 ③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 ④ 연쇄효과(halo effect)

28. 다음 중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익의 실체설은 공동체의 이익과 절대가치 등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 ②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이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조정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 ③ 신행정론의 등장으로 행정의 규범적 성격과 가치지향성을 강조하면서 공익이 강조되었다.
- ④ 본질적 가치로는 합리성, 능률성, 민주성 등이 있고,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29.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개인은 합리적인 행위자이며, 행위자의 선호는 제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 ②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를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정당한 구조와 기능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파악하여, 결과성의 논리보다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30. 다음 중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간적 분화란 물리적인 시설과 조직의 구성원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 ② 수평적 분화란 조직의 책임과 권한의 계층적 분화의 정도를 말한다.
- ③ 수직적 분화란 개인 및 단위 부서간 업무의 세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전문화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업무는 단순해진다.
- ④ 조직구조의 공식성은 조직계층 상하 간의 권한의 분배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31. 다음 <보기> 중 인사행정 발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미국에서는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통과됨에 따라 실적주의가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 ㉡ 미국의 잭슨(A. Jackson)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로서 실적주의를 도입하였다.
- ㉢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자격 등을 공직임용 기준으로 하는 제도이다.
- ㉣ 엽관주의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운동이 실적주의의 수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다음 중 임용시험의 효용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험의 결과로 나온 성적의 일관성을 신뢰성이라고 하며,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번 시험을 치르더라도 성적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신뢰성을 갖게 된다.
- ②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타당성이라고 하며, 기준타당성·내용타당성·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 ③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시험문제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기준타당성이다.
- ④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으로 신뢰성이 낮으면 타당성이 낮다.

33. 정책참여자 간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다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것은?

— < 보 기 > —

- (㉠)은/는 관료, 의원, 기업가, 학자, 언론인 등을 포함하여 특정영역에 관심있는 사람들 누구나 참여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으로서, 경계가 모호하며 개방성이 높은 것을 설명한다.
- (㉡)은/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료,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학자 등이 모여 이해를 공유하고 생산적·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설명한다.
- (㉢)은/는 행정기관의 관료와 의회 상임위원회, 이익집단이 상호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특정 영역의 정책결정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	㉡	㉢
①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하위정부 모형
②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하위정부 모형
③	정책공동체	조합주의	이슈네트워크
④	이슈네트워크	하위정부 모형	정책공동체

34. 다음 중 조직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솔범위의 원리란 상관·감독자 등이 부하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부하의 수가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전문화의 원리란 업무를 종류별·성질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할수록 능률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부성화의 원리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사한 업무를 묶어 하위부서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명령 통일성의 원리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행동에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35. 다음 중 특수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선발된 사람들로 구성된 팀으로, 과업이 완수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조직형태는?

- ① 태스크 포스 ② 프로젝트 팀
- ③ 매트릭스 조직 ④ 네트워크 조직

36. 다음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무원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조에 전임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②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③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2021년 12월 11일부터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는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없이 노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7.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예외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단일성의 원칙이란 예산은 정해진 목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완전성의 원칙이란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 ③ 공개성의 원칙이란 행정부가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입법부가 예산을 먼저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준예산은 예산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사항이다.

38. 다음 중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면서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정부 예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②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한 곳은 재무부 예산국이다.
- ③ 1999년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통합하였다.
- ④ 김영삼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였다.

39. 다음 <보기> 중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공무원연금제도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하고 그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 ㉡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공무원 연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실시되었다.
- ㉢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다.
- ㉣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제도는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 ㉤ 기여금을 부담하는 재직기간은 최대 30년까지이다.

- ① 없음 ② 2개 ③ 3개 ④ 4개

40. 다음 중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예산·회계·결산 등을 위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운영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운영하고 있다.
- ② ‘온나라 시스템’은 정부 내부에서의 과제관리, 문서관리 등 전반적인 행정프로세스를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표준화한 시스템이다.
-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각 행정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전자적 인사관리를 위해 ‘e-사람’을 운영하고 있다.

헌 법

1. 다음 국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인과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③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외국인의 귀화허가 요건은 ‘귀화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 ②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의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③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은 제헌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현행헌법에서 이를 형사피의자까지 확대하였다.

3. 다음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 ②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고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도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 작용한다.
- ③ 자기책임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 ④ 민주주의 원리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능력을 존중하고 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4. 다음 환경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독서실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야 할 입법 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비사업용자동차의 타인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 이용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미관과 도로 안전 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③ 학교시설에서의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당시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구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환경권을 보호해야 하는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5. 다음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 ② 오늘날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다 정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③ 공소시효제도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면, 소급입법의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6. 다음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포괄 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②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한국 교육방송공사 교재와 연계하여 출제하는 것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 ④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중 그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7. 다음 <보기> 중 선거제도와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헌법재판소는 1인 1표제 하의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은 민주주의원리, 직접선거의 원리, 평등선거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에 대한 참석 기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므로 그 초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과 관련한 평등권을 침해한다.
- ㉣ 헌법 규정상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비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이 근로자나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교도소 수용자들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수형자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유족연금수급권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은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서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한 것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9. 다음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 ②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할 수 있다.
- ③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 및 대법원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형식적 헌법사항이다.
- ④ 관습헌법은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0. 다음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 ③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 ④ 「근로기준법」 조항이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이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11. 다음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비추어볼 때 개인의 사적 거래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사후적·구체적 규제보다는 사전적·일반적 규제방식을 택하여 국민의 거래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④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은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를 통한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하여 벌이는 운동도 포함한다.

12. 다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 ② 사적자치에 의해 규율되는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 ③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13. 다음 <보기> 중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법률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여 그렇지 못한 정당을 차별화하는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 ㉡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 후손의 인격권, 즉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 ㉢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닐 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가 없다.
- ㉣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다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범죄피해구조금은 국가의 재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바, 구조금에 대한 청구권 행사대상을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 안의 범죄피해에 한정하고, 향후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에도 구조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
- ③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제척기간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는 것은,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이며 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합리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15. 다음 기본권의 갈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교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 ② 친양자 입양을 성립시키기 위해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경우 가족생활에 관한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 ③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 ④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종립학교는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린다.

16. 다음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은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④ 「국가배상법」은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해야 함을 전제로 모든 공무원의 직무행위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동법 제2조(배상책임)의 의미와 목적을 살펴볼 때 법관과 다른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17. 다음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방송사업자가 구 「방송법」상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다.
-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서 대처할 수 없는 재정·경제상의 국가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비상입법조치라는 속성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의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 ④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 일반음식점 운영자가 소유하는 영업 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이므로 보상규정의 부재는 일반음식점 운영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18. 다음 알 권리 및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시험성적 공개청구기간을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로 제한하는 동법 부칙 조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 ②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 ③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 ④ 재판이 확정되면 속기록 등을 폐기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39조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19. 다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전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법률 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②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치료감호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보전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
- ③ 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④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기에,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가가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의 의무를 진다.

20. 다음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등록료 100만원을 납부하도록 정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은 변호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출석주의를 완화하여 최초의 전자등기신청 전에 한 차례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한 「부동산등기규칙」 조항은 법무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은 세무사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1. 다음 <보기> 중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까지 포함한다.
- ㉢ 국가에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연속적 발전과정에 대하여 생명이라는 공통요소만을 이유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22. 다음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입영기피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 즉 ‘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②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
- ③ 양심적 병역거부는 실상 당사자의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이며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도 갖는다.
- ④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게 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23. 다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 ②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 ③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정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제정하는 입법에 적용요건, 적용대상,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 ④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후혼배우자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24. 다음 <보기> 중 「청원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 보기 —

- ㉠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 부터 ()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 이내(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105 ② 134 ③ 135 ④ 150

25.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기준을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원칙으로 나눌 때, 다음 <보기> 중 비례원칙을 적용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기 > —

- ㉠ 상이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
-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조항
- ㉣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법조항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

① ㉠, ㉡ ② ㉠, ㉢ ③ ㉡, ㉣ ④ ㉢, ㉣

26. 다음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은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헌법 규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③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 현역복무 과정에서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 예비 전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군인사법」 제41조 제4호 및 단서, 제42조는 예비역 복무의무자인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세금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7. 다음 이중처벌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된 이후 다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선고 및 집행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양도담보 채권자가 이전등기시 채권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것은 그 목적이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범죄예방과 사회보호에 있어 형벌과 본질적 차이가 나지 않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과 병과될 경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④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사회봉사 등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예되었던 본형 전부를 집행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8. 다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
-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음란표현'은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9. 다음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과는 담당 직무가 다르고, 공무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 재산등록의 필요성 정도도 서로 다르므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사 계급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경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③ 변호사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조항은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0. 다음 근로 3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 시민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업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이유로,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를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③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하여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조항과,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1. 다음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법률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②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 ③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은 아니다.
- ④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2.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 ②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 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상태에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 ③ 교도소장이 금지물품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위 수형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검열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④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33. 다음 헌법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 ②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 영역에서 경과 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 합치적 법률해석이다.
- ③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법리이다.
- ④ 헌법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34.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8조 제4항이 의미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 ②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도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근대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
- ④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35. 다음 <보기> 중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 ㉠ 헌법 제18조에서 그 비밀을 보호하는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 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등을 들 수 있다.
- ㉡ 통신의 비밀이란 서신·우편·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의 내용과 통신이용의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하므로, 휴대전화 통신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아직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 ㉢ 인터넷개인방송의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으로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제3자가 비공개 조치가 된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식회사 OO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 ① ㉠(O), ㉡(O), ㉢(X), ㉣(O)
- ② ㉠(O), ㉡(X), ㉢(O), ㉣(X)
- ③ ㉠(O), ㉡(O), ㉢(X), ㉣(X)
- ④ ㉠(X), ㉡(X), ㉢(X), ㉣(O)

36. 다음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②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달리 개별 경유차의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④ 「공무원연금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금액도 다른 유족과 동일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게 한 것은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7. 다음 소급입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도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② 시혜적 소급입법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 ③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중 위해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까지 그 유족에게 순직공무원보상을 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조항이 신법을 소급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재량을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한 동법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8. 다음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울교통공사는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공사이나, 서울특별시와 독립적인 공법인으로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의 신분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등,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라는 직위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당연해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조항은 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당연퇴직 사유로 정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③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률을 고려해 볼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9. 다음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의 경우에 이의절차 등 법원에 의한 판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③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④ 간이기각제도는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써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도 가능하므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0. 다음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초·중등학교 교원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고 있다.
- ④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 범인을 범인으로 보고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관세법」 조항은, 범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